

# “반값등록금 MB약속 지켜라”

국회 상임위 첫날…여야, 저축銀 사태·중수부 폐지 공방

국회는 13일 교과위와 기재위·정부·법사위 등 8개 상임위를 본격 가동,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했다. 이 날 상임위 회의에서는 특히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저축은행 사태 등이 최대 핵심으로 떠올랐다.

◇교과위=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이행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자 맞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관련 행사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반값 등록금’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쓴 점을 인정하지만 실현 방식에서는 야당 주장과 차이가 있다”면서 “민주당도 최근 등록금 대책을 바꾸고 있는데, 자구 정치공세로 물아가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반값등록금, 한나라당과 앤비(MB)는 약속을 지켜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질의를 시작하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종이를 떼라”고

항의해 잠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재위=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 철회에 대해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반값등록금은 많은 등록금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생대책이고 복지정책”이라며 “소득세, 법

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4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지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다소 줄었지만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든 2010년에는 과거 ‘감세→세수 감소→경제성장→세수증가’의 선순환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세를 지지했다.

◇법사위=대검 중앙수사부의 저

죽은행 비리 수사가 핵심으로 떴다. 중

수부 존폐 문제에 대한 여야의 찬반을 대변하듯 이번 수사에서의 중수부 역할론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간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이준석 의원은 “중수부 수사는 이번 저죽은행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정권의 임박에 맞는 수사였다”며 “중수부를 해체해도 권력형 비리와 재벌수사를 잘 할 수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저죽은행 피해자들은 지금 중수부만 쳐다보고 있다. 철저히 추적해 은닉했을 수도 있는 자금을 환수해 피해보상에 써달라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라고 응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7년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관련 행사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사진(왼쪽 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과 앤비(MB)는 약속을 지켜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채 회의에 참석했다.

여야 정치권의 ‘사법개혁안’이 검찰의 반발 등 논란을 불러 일으킨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무려 1년4개월 동안이나 논의해온 검찰과 법원 개혁안이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비판 여론과 함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3일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문제 등 4개 핵심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 이들 사안을 더 이상 논의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 말 종료

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4개 핵심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개특위 활동은 6월 말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달 17일과 20일, 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タル 핵심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의 성과에 대해 이들은 “전관예우 금지법은 22년간 만들어 보려고 했던 법안”이라며 “대법관 제

청 자문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 검찰총장추천위원회 등을 법제화한 것과 압수수색에 대해 법적 제약을 가한 것도 국민 기본권을 신장한 일보 전진”이라는 입장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이 중수부 폐지 등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수부 폐지나 특별수사청 설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회 ‘사법개혁’ 끝내 무산

사개특위, 이달말 활동 종료…중수부 폐지 등 핵심쟁점 논의 중단

## 박근혜-손학규 ‘진검승부’

국회 기재위 첫 조우…의정활동 경쟁시작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조우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 경쟁을 시작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오전 10시20분쯤 기재위 회의에 출석해 먼저 도착해 있던 박 전 대표에게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게 되네요”라며 악수를 건넸고, 박 전 대표도 웃으면서 응 대했다.

하지만, 두 유력 대선주자의 이날 상임위 질의방식은 대조적이었다. 박 전 대표는 구체적인 정책 대

안 제시에 주력했고 손 대표는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지금 4대 보험 등 사회보험이 단 하나의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가입자가 283만 명이나 되며 이를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또 이중 83%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25% 정도밖에

는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사방이 치열화”이라며 “가계부채는 800조나 되고 국가채무는 400조에 유판하고 있다. 청년실업·전세대란·불가급등·고용감소·경기침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의 몰락 등 전체적인 민생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민생불안은 개인의 책임이기보다는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이 정부 들어 4년 내내 적자이고 국가부채도 4년 동안 136조가 증가하는 등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공공부채까지 합하면 700조가 넘어서 세계 3대 재무국이라는 오명을 들고 있다”며 “문제는 가치와 철학이다.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반값등록금’ 당내 갈등 조짐

지도부 일방통행 비판…사립대 재정투입 ‘부적절’ 지적도

민주당 내에 당의 반값등록금 대책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현재까지는 내놓고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공론화될 경우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판의 요체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도부의 일방통행 운영, 지난달 31일 의원워크숍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등록금 대책의 초점을 소홀 하위 50% 계층에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가 대학생 촛불

## 여, 등록금 완화 내일 ‘국민공청회’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당정책 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앞서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공청회에서는 학생 대표들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표들, 대학·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망라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당정책 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앞서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공청회에서는 학생 대표들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표들, 대학·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망라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당정책 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앞서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공청회에서는 학생 대표들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표들, 대학·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망라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당정책 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앞서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공청회에서는 학생 대표들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표들, 대학·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망라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당정책 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앞서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공청회에서는 학생 대표들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표들, 대학·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망라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당정책 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앞서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공청회에서는 학생 대표들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표들, 대학·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망라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당정책 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앞서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공청회에서는 학생 대표들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표들, 대학·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망라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당정책 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앞서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공청회에서는 학생 대표들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표들, 대학·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망라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당정책 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앞서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